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7.13.(목) 10:00	배포	2023.7.13.(목)		
담당부서	IT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장성옥	(02-3145-7420)
		담당자	팀 장	이수인	(02-3145-7425)

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,

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CIO 간담회 개최

-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이후 진행한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설명하고, 재해 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비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

I 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에도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(Business Continuity)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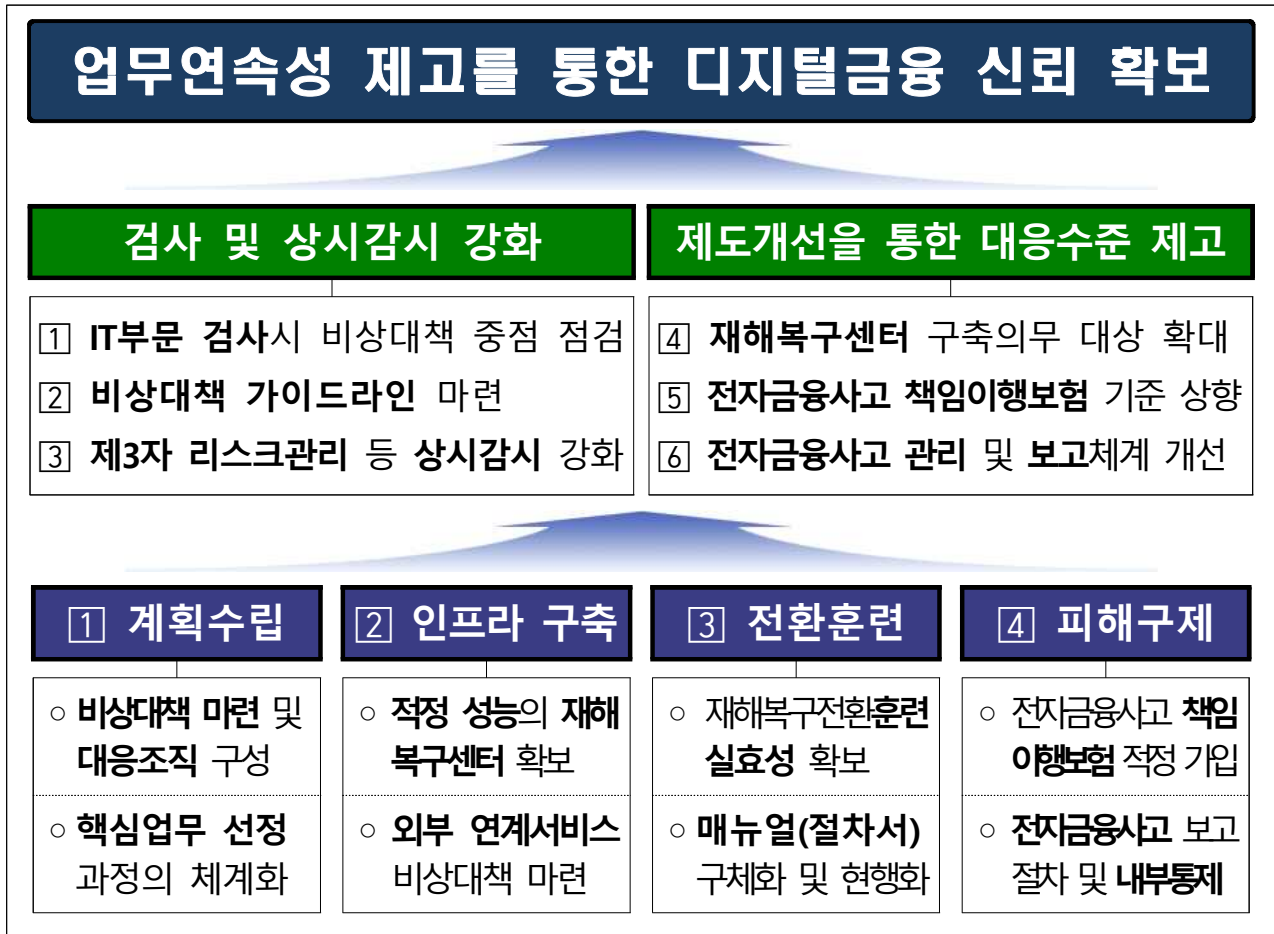
[간담회 개요]

- ☑ 일 시 : '23. 7. 13.(목) 10:00~11:3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본원 9층 대회의실
- ☑ 참석자 : 금감원,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주요 금융회사 CIO 등 30여 명
 - (금 감 원) 수석부원장 및 IT검사국장
 - (유관기관) 금융결제원, 은행연합회,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핀테크산업협회
 - (은 행)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카카오뱅크
 - (증 권) 미래에셋증권, 한국투자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삼성증권
 - (보 험)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현대해상, KB손해보험
 - (중소서민) SBI저축은행, 웰컴저축은행, 신한카드, 국민카드
 - (전자금융) 네이버파이낸셜, 카카오페이, 비바리퍼블리카

II. 수석부원장 주요 발언내용

- 지난해 카카오 화재사고에서도 보았듯이,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
 - 모든 소비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
- IT 비상대책 점검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IT 내부통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,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기 바람
 -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,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 주시고,
 -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 주시기 바람
 - 이 두 가지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, 한국거래소, 금융결제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
- 금융감독원은 검사시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회사는 엄중 조치하고,
 -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음
- 업무 연속성 계획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장애 등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람,
 - 이 자리를 통해 각 회사의 비상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, 업무 연속성 확보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

Ⅲ. 금융IT 비상대책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



1

점검결과 주요내용

①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대응조직의 역할이 포함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, 전사적인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핵심업무 선정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

- 비상대책에 재해 대응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,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 부여가 불분명
- 업무영향분석*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, 단편적인 평가요소만으로 업무별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핵심업무의 누락 발생

* 단위업무를 식별하고 잠재손실 추정을 포함한 개별 업무 중단시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업무별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핵심업무 선정의 기초가 됨

② **적정 성능과 규모를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확보하고, 외부 연계 서비스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**

-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중 중소형사 일부*(약 118개사)는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음
 - * 다만, 관련 법규상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가 있는 회사는 아님
- 재해복구센터 서버 등 용량이 주전산센터에 크게 미달하거나, 대외기관 전용선이 누락되어 재해발생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문
- 외부 연계서비스 계약시 IT위험평가 절차 및 손해배상 등 계약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,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 미흡

③ **재해복구 전환훈련의 실효성 확보 필요**

- 훈련시 구동테스트를 일부 시스템만 수행하거나 주요 대외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대상에서 제외하여, 훈련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곤란
- 재해복구센터 기동절차 자동화 미흡 등으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, 재해복구센터 전환 절차서에 대한 현행화가 미흡

④ **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적정 보험 가입 및 사고 관리 필요**

-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*으로,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례 발생
 - * 금융투자 139억원, 중소서민 23억원, 은행 2억원, 전자금융업 8억원 등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*
 - * 특정 유형의 사고에 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, 사고발생 건당 보상한도를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, 전자금융업 추가 등록 이후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 누락 등
- 장애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, 보고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고 미보고 사례 빈발

① IT부문 감사시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 중점 점검

- 정기 및 수시검사 수행시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, 재해 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

②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

- 검사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, 감독규정을 보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

③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 강화

-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 보고서에 IT위험평가* 및 손해배상 항목을 추가하여 연계서비스 제공 제3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

* 제3자 선정절차(실사 등), 제3자 모니터링, 출구전략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

④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 확대

- 전자금융업무 수행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확대를 추진

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

- 최근 손해배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

⑥ 전자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추진

-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의 유형, 처리단계, 조치방법, 영향도·심각도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추진

※ ②, ④, ⑤, ⑥ 관련 구체적 내용·기준은 금융위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 예정

IV. 참석자 발언내용 및 향후 계획

- 간담회에 참석한 CIO들은 자사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였음
 - 카카오페이는 작년 사고를 통해 상세 매뉴얼을 포함한 재해복구 관리체계의 정비, 단일 인증체계의 이원화, 재해복구센터 자동 전환시스템 이중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발언
 - 기업은행은 휴대폰 명의인증 등 특정 제휴업체 장애 발생시에도 타 업체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연계서비스에 대한 업체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
- 아울러, 참석자들은 디지털금융 업무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향에 공감하면서, 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, 회사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, 사례 교육 실시 등을 건의
 - 최근 타 업권과의 연계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, 실질적인 사고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를 고려할 필요
 - 중소형사가 대형사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, 관련 규제 적용에 차등화 필요
 -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경영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사고의 원인 및 시사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
- 금융감독원은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디지털 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,
 -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(별도 보도자료 배포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